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파문

법원 “반성 한다... 그러나 이건 마녀사냥”

과거사위 “비공개가 비정상” 공개 결정 “진실·화해위에서 ‘화해’는 어디 갔나”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들의 명단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이하 과거사위)도 긴급조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강행키로 해 법조계가 ‘여론몰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판사는 누구=한겨레신문은 30일 진실화해위가 작성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분석,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1천412건을 판결한 판사는 492명이며 이 중 12명이 현재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직에 재직 중이라고 실명을 보도했다.

이 명단에는 이공현,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양승태, 김황식, 박일환, 이흥훈 대법관 등이 당시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장운기 법원행정처장과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이 가운데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황식 대법관이 각각 구태와 장성 출신으로 광주일고 동문이다.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한 101명 중 대법관을 지낸 판사들은 29명이다. 또 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관은 14명이다. 전직 판사들 중에는 김용준 전 현재 소장과 윤관, 최종영, 김용철, 민복기 전 대법

원장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 실명 공개 강행 배경=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15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 참석 만장일치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한범 대외협력과장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긴급조치 판결실태를 분석했을 뿐”이라며 “판결 분석 때 판사 이름 등이 당연히 실려 있

는데 이를 비공개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비공개가 더 비정상적이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1일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다음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과거사위가 파문 우려에도 이 같이 결정 한 것은 공개를 철회할 경우 오히려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과 애초부터 무리한 시도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임시 전원회의를 소집해 공개를 결정 한 것은 반대 여론이 더 확산되기 전에 공개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술렁이는 법조계=법조계는 당시 실정법에 따른 판결을 현재 잣대로 재단하는 ‘여론

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이명철 판사는 “과거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 과거에 대한 뼈저린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실명을 공개해 당시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을 비양심적인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화해’는 어디로 갔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질타는 얼마든지 좋지만, 실명까지 공개한다면 유신체제에 행해졌던 또 한 번의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낮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광주일보 신항래(맨 왼쪽) 편집국장 등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해도 이번 대선·총선 그대로”

盧대통령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2월 임시국회 폐회후 개헌안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4년 연임제 개헌안 내용과 관련, “(개헌이) 이번 선거(대선·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월 임시국회 폐회 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개헌 후) 5년 더 지나서 2012, 13년 그때 가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임기내에 이른 바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 대로 각각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개헌 부칙에서는 임기를 서로 맞추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이는 원칙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과 규정을 만들 때 따라서는 4년 뒤에 (임기조정이) 적용되게 할 수도 있다는 기술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제안한 1단계 개

헌을 하고 나면 개헌 논의시기에 제한이 없어지고, 임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언제나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장차 개헌 논의가 가능하도록 1차적으로 이번 1단계 개헌을 하자는 게 제가 제기한 취지”라며 이번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문제도 다루자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노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입법사안, 민생입법도 있고 개혁입법도 있다”면서 “그 입법 사안의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탈당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 ‘저 사람은 무슨 셈이 있나’ 또는 ‘아,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보따리 정치냐’ ‘명분의 정치냐’ 이렇게 보고 서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점에 있어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다”며 “최대한 연내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2단계 지역균형발전 예산 규모에 대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물량적 차원에서 보면 토목분야의 총투자자 116조4천억원이 될 것이고, 이 중 2010년까지는 약 53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 대권도전 선언 與대선구도 변수 촉각

여권의 통합신당 문제가 가닥을 잡지 못하고 흥미를 거둬주고 있는 가운데 강운태 전 의원(사진)이 30일 서울 63 빌딩에서 장·관계 인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갖고 대권 도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진다면 고건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호남 민심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정국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제3차대에서의 통합신당 창당이 구체화된다면 강 전 의원이 구성한 정치적 결사체도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아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을 삼반기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집단, 정치인 등이 함께하는 정치 결사체 ‘국민봉사정치연합’을 창설할 것”이라며 “이후 기존 정치권과 연대를 통해 민주적 경선 절차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 전 의원의 대선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전국적 지명도가 기존 여권의 대선 후보들에 비해 떨어진다든가 강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정당 형태의 정치적 결사체의 인적 구성과 조직을 살펴본 뒤에 평가하겠다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강 전 장관이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확보한 데다 정치적 결사체 구성이 성공적으로 이뤄

진다면 고건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호남 민심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정국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제3차대에서의 통합신당 창당이 구체화된다면 강 전 의원이 구성한 정치적 결사체도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아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존 정당이 아닌 강 전 의원 측으로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경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강 전 장관이 통합신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정치적 재기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강 전 장관이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확보한 데다 정치적 결사체 구성이 성공적으로 이뤄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장 내세운 청탁 면박줘 돌려보내라”

차시장 “청탁 들어오는 것 알고 있다”



“외부에서 시장의 이름을 팔아 가며 해오는 청탁은 절대 들어주지는 안된다.”

지난해 말 청탁자진 신고제를 선포한 차 시장은 “청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고 공직자는 반드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직자는 유혹을 독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달 초 청탁이 들어오면 자진신고할 것과 24시간 이내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청탁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접수된 내용은 한건도 없는 일”이라며 “외부인이 시장과의 지

연이나 학연, 혈연 등을 내세워 청탁을 해올 경우 반드시 들어주지 말고 면박을 줘 돌려 보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청탁이 들어올 경우 삼급자(기획관리실장)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했으나 신고된 것이 없다”면서 “청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고 공직자는 반드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직자는 유혹을 독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달 초 청탁이 들어오면 자진신고할 것과 24시간 이내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청탁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접수된 내용은 한건도 없는 일”이라며 “외부인이 시장과의 지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온돌과 지않는 편인침, 소리없는 편인침
 OPEN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온돌과 지않는 편인침, 소리없는 편인침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온돌과 지않는 편인침, 소리없는 편인침

2007년 신 재생에너지지열시스템 국가 보조 사업 안내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시설
 2. 지원대상 지역
 3. 지원대상 시설
 4. 지원대상 시설
 5. 지원대상 시설
 6. 지원대상 시설
 7. 지원대상 시설
 8. 지원대상 시설
 9. 지원대상 시설
 10. 지원대상 시설
 11. 지원대상 시설
 12. 지원대상 시설
 13. 지원대상 시설
 14. 지원대상 시설
 15. 지원대상 시설
 16. 지원대상 시설
 17. 지원대상 시설
 18. 지원대상 시설
 19. 지원대상 시설
 20. 지원대상 시설
 21. 지원대상 시설
 22. 지원대상 시설
 23. 지원대상 시설
 24. 지원대상 시설
 25. 지원대상 시설
 26. 지원대상 시설
 27. 지원대상 시설
 28. 지원대상 시설
 29. 지원대상 시설
 30. 지원대상 시설
 31. 지원대상 시설
 32. 지원대상 시설
 33. 지원대상 시설
 34. 지원대상 시설
 35. 지원대상 시설
 36. 지원대상 시설
 37. 지원대상 시설
 38. 지원대상 시설
 39. 지원대상 시설
 40. 지원대상 시설
 41. 지원대상 시설
 42. 지원대상 시설
 43. 지원대상 시설
 44. 지원대상 시설
 45. 지원대상 시설
 46. 지원대상 시설
 47. 지원대상 시설
 48. 지원대상 시설
 49. 지원대상 시설
 50. 지원대상 시설
 51. 지원대상 시설
 52. 지원대상 시설
 53. 지원대상 시설
 54. 지원대상 시설
 55. 지원대상 시설
 56. 지원대상 시설
 57. 지원대상 시설
 58. 지원대상 시설
 59. 지원대상 시설
 60. 지원대상 시설
 61. 지원대상 시설
 62. 지원대상 시설
 63. 지원대상 시설
 64. 지원대상 시설
 65. 지원대상 시설
 66. 지원대상 시설
 67. 지원대상 시설
 68. 지원대상 시설
 69. 지원대상 시설
 70. 지원대상 시설
 71. 지원대상 시설
 72. 지원대상 시설
 73. 지원대상 시설
 74. 지원대상 시설
 75. 지원대상 시설
 76. 지원대상 시설
 77. 지원대상 시설
 78. 지원대상 시설
 79. 지원대상 시설
 80. 지원대상 시설
 81. 지원대상 시설
 82. 지원대상 시설
 83. 지원대상 시설
 84. 지원대상 시설
 85. 지원대상 시설
 86. 지원대상 시설
 87. 지원대상 시설
 88. 지원대상 시설
 89. 지원대상 시설
 90. 지원대상 시설
 91. 지원대상 시설
 92. 지원대상 시설
 93. 지원대상 시설
 94. 지원대상 시설
 95. 지원대상 시설
 96. 지원대상 시설
 97. 지원대상 시설
 98. 지원대상 시설
 99. 지원대상 시설
 100. 지원대상 시설